

# 정청래 특검 부실 검증 사과… 민주 내홍 가라 앉을까

최고위 회의 “대통령께 누 끼쳐… 추천 방식 빈틈 고쳐 나가겠다”  
이성윤 “전준철 변호사, 쌍방을 사건 무관… 윤 정권서 탄압 받아”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9일 특검 후보 검증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다시 한 번 사과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시 한 번 대통령께 누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대단히 죄송하다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의 최종 책임은 당 대표인 저에게 있다. 당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 공(功)은 당원들에게 돌리고 과(過)는 제가 안고 간다”고 밝혔다.

반면, 정 대표는 특검 후보 검증을 담당한 원내 지도부에 화살을 돌리기도 했다.

정 대표는 “특검 추천 사고를 보면서 그동안의 관례와 관행을 고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좋은 사람이 있으면 원내 지도부에 추천하고, 원내 지도부가 그 사람을 낙점하고 추천하는 방식이었는데 여기에 빈틈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종합특검 후보로 검찰 ‘특수통’ 출신인 전준철 변호사를 추천했는데, 그는 2023년 이른바 ‘대북송금 의혹 사건’ 관련 재판에서 김 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변호를 맡았던 인물이다.

이에 이 대통령은 상당한 불쾌감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당에서도 정청래 지도부를 향한 비판이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여당이 아닌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인사를 특검으로 임명했다.

정 대표의 거듭된 사과에도 당내 반발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 대통령의 질타가 알려진 이후 첫 최고위원회의가 열린 이날 비당권파 최고위원들은 전 변호사를 추천한 진정(진정청래) 계 이성윤 최고위원을 겨냥한 비판을 쏟아냈다.

이연주 최고위원은 “전 변호사를 특검 후보로 추천했다는 것은 단순 실수로만 치부할 수 없는 뼈

아픈 실책”이라며 “우리 당과 대통령에게 심각한 정치적 부담을 주는 행위였으며, 제2의 체포동의 안 가결 시도와 다행없다는 게 당원과 지지자들의 시각”이라고 직격했다.

이는 2023년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였을 때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으로 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당시, 당내 이탈표로 인해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던 일을 상기한 것이다.

김성태 변호인단 출신은 특검 후보로 추천한 행위 자체를 체포동의안 가결 시도에 비견할 만큼 심각한 ‘정치적 반란’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황명선 최고위원도 “검찰의 ‘이재명 죽이기’에 앞장섰던 김성태 변호인을 추천한 것은 분명한 사고”라며 “이 문제는 변명으로 덮을 일이 아니다. 별 일 아닌데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식의 물타기 또한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전 변호사를 추천했던 이 최고위원은 “추천 과정에서 좀 더 세밀하게 살피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특검 청거 과정에서 정치적 해석과 음모론적 의혹이 제기되는 게 안타깝다”고 반박하는 모습도 보였다.

그는 “저는 누구보다 윤석열·김건희 내란과 국정농단에 대해 터를 깨닫고 청산하는 수사를 원했던 사람”이라며 “(전 변호사는) 검사 시절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한동훈 채널A 사건을 저와 함께 담당해 윤석열 정권에서 압수수색을 당하는 등 탄압받았던 변호사”라고 했다.

그러면서 “쌍방울 사건에 이름을 올린 것은 김 성태 본인이나 대북송금 조작 사건과는 무관하며, 그마저도 변론 중간에 중단했다”며 “대북송금 조작 의혹 사건의 변호인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오피니언 기자 kroh@kwangju.co.kr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이수진 여성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들과 지방 선거 출마 예정자, 현역 기초단체장 및 지방 의원, 여성 당원들이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6 지방선거 승리 여성 결의대회에서 ‘자선 승리와, 여성 공천 30%’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 민주, 김희수 진도군수 제명… 경선 판도 급변

### ‘외국인 처녀 수입’ 발언 논란

더불어민주당이 ‘외국인 처녀 수입’ 발언으로는 논란의 중심에 선 김희수 진도군수를 전격 제명했다.

6·3 지방선거 출마가 유력했던 김 군수는 민주당에서 제명됨에 따라 당내 경선은 물론 선거 판도가 급변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9일 오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김 군수를 만장일치로 제명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중대한 징계 사유가 발생한 당원 1명에 대해 최고위 비상 징계가 의결됐다”며 “대상자는 김 군수이며, 사유는 지난 4일 광주·전남 타운홀 미팅에서 외국인 여성에 대한 비하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내용”이라고 밝혔다.

김 군수는 이날 생방송으로 진행된 ‘광주·전남 행정통합 찾아가는 타운홀 미팅’에서 “스리랑카나 베트남이나 젊은 처녀를 수입해 농촌 총각 장가도 보내는 등 특별 대책을 내려야지, 아니 사람도 없는데 산업만 살리면 제대로 되겠냐”고 발언해 논란을 촉발했다.

김 군수는 즉각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논란이 증폭되면서 결국 당에서 제명됐다.

김 군수는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재선 도전이 확실시 되는 상황이었다.

지난해 초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하면서 여당 당직으로 현직 프리미엄을 등에 업고 선거에 나설 유력한 진도군수 후보자로 분류돼 왔다.

당내 경선에서도 초선인 점을 감안, 다른 입지 자보다 유리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김 군수가 빠진 당내 경선에는 이제 각 전 총부지 방위부 청장과 김인정 전 남도의원, 김희동 전 전남 도의원 등이 경쟁할 것으로 보인다.

김 군수가 무소속 출마를 결심할 경우 민주당 경선에서 승리한 후보와 진경 승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김 군수는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무소속으로 나서 58.17% 득표율을 기록, 41.82%를 얻은 민주당 후보를 16.35%포인트 차로 따돌렸다.

김 군수는 당시 군수 도전 ‘4수’ 만에 승리했는데, 오랜 기간 지역 민심을 닦아온 것이 승리 요인으로 꼽혔다. 김 군수가 또 다시 무소속으로 선거에 나설 경우 조국혁신당 후보의 출마로 인한 삼파전 가능성도 나온다.

/김민석 기자 mskim@

## 한병도 “5·18 원포인트 개헌 마지막 기회”

### 민주 최고위 회의… 헌법 전문 수록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 촉구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9일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과 국민투표법 개정”을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새기기 위한 원

포인트 개헌의 골든타임이 마지막 기로에 서 있다”며 “우선 재외국민의 투표권 행사를 제한하는 국민투표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투표법의)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 진지 이미 12년이 지났다. 더 이상의 직무 유기는

안 된다”며 “국회가 하루라도 빨리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의 동참을 촉구한다”면서 “민주당은 내일 원내에 ‘민생경제 입법 추진 상황실’을 설치한다. 모든 상임위원회도 신속하게 일정을 잡고 입법 역량을 총동원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지배구조 개혁을 통해 우리 자본시장의 신뢰를 끌어올리기 위한 3차 상법 개정안과 검찰·사법개혁 법안, 행정통합특별법안 처리에도 박차를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오피니언 기자 kroh@kwangju.co.kr

## 국힘, 친한계 김종혁도 제명 처리

### ‘언론 인터뷰 지도부 모욕’ 사유… 김, 법적 대응 예고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서 ‘탈당 권유’ 중징계를 받은 진한(친한동훈) 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9일 결국 제명됐다.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경기 고양병 당협위원장인 김 전 최고위원에 대한 윤리위의 당원 징계안이 보고돼 최종 제명 처리됐다. 고 최보윤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앞서 김 전 최고위원은 언론 인터뷰 등에서 당 지도부와 당원을 모욕하는 언행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윤리위에서 ‘탈당 권유’ 처분을 받았으며, 당 한·당규에 따라 열흘 내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최고위 보고를 거쳐 제명 처리됐다.

김 전 최고위원은 법원에 징계 결정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태

다. 한편 이날 최고위에서는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6·3 지방선거에 적용할 공천 관련 내용을 담은 ‘당헌·당규 개정안’을 보고하고, 이를 의결하기 위한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를 각각 11일과 12일에 소집했다.

개정안에는 중앙당 공관위가 인구 50만명 이상이거나 최고위가 의결한 자치구·시·군의 기초단체장의 공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지방선거와 국회 의원 선거 공천심사 기준에 ‘당 기여도’ 평가 결과를 반영하는 항목이 추가된다.

당 관계자는 “구체적인 평가 항목과 채점 방법은 개정된 당헌·당규를 바탕으로 공관위가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다.

한편 이날 최고위에서는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6·3 지방선거에 적용할 공천 관련 내용을 담은 ‘당헌·당규 개정안’을 보고하고, 이를 의결하기 위한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를 각각 11일과 12일에 소집했다.

개정안에는 중앙당 공관위가 인구 50만명 이상이거나 최고위가 의결한 자치구·시·군의 기초단체장의

공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지방선거와 국회 의원 선거 공천심사 기준에 ‘당 기여도’ 평가 결과를 반영하는 항목이 추가된다.

당 관계자는 “구체적인 평가 항목과 채점 방법은 개정된 당헌·당규를 바탕으로 공관위가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 관계자는 “구체적인 평가 항목과 채점 방법은 개정된 당헌·당규를 바탕으로 공관위가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 관계자는 “구체적인 평가 항목과 채점 방법은 개정된 당헌·당규를 바탕으로 공관위가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 관계자는 “구체적인 평가 항목과 채점 방법은 개정된 당헌·당규를 바탕으로 공관위가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 관계자는 “구체적인 평가 항목과 채점 방법은 개정된 당헌·당규를 바탕으로 공관위가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 관계자는 “구체적인 평가 항목과 채점 방법은 개정된 당헌·당규를 바탕으로 공관위가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 관계자는 “구체적인 평가 항목과 채점 방법은 개정된 당헌·당규를 바탕으로 공관위가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 관계자는 “구체적인 평가 항목과 채점 방법은 개정된 당헌·당규를 바탕으로 공관위가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 관계자는 “구체적인 평가 항목과 채점 방법은 개정된 당헌·당규를 바탕으로 공관위가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 관계자는 “구체적인 평가 항목과 채점 방법은 개정된 당헌·당규를 바탕으로 공관위가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 관계자는 “구체적인 평가 항목과 채점 방법은 개정된 당헌·당규를 바탕으로 공관위가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 관계자는 “구체적인 평가 항목과 채점 방법은 개정된 당헌·당규를 바탕으로 공관위가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 관계자는 “구체적인 평가 항목과 채점 방법은 개정된 당헌·당규를 바탕으로 공관위가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 관계자는 “구체적인 평가 항목과 채점 방법은 개정된 당헌·당규를 바탕으로 공관위가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 관계자는 “구체적인 평가 항목과 채점 방법은 개정된 당헌·당규를 바탕으로 공관위가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 관계자는 “구체적인 평가 항목과 채점 방법은 개정된 당헌·당규를 바탕으로 공관위가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 관계자는 “구체적인 평가 항목과 채점 방법은 개정된 당헌·당규를 바탕으로 공관위가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 관계자는 “구체적인 평가 항목과 채점 방법은 개정된 당헌·당규를 바탕으로 공관위가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 관계자는 “구체적인 평가 항목과 채점 방법은 개정된 당헌·당규를 바탕으로 공관위가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 관계자는 “구체적인 평가 항목과 채점 방법은 개정된 당헌·당규를 바탕으로 공관위가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 관계자는 “구체적인 평가 항목과 채점 방법은 개정된 당헌·당규를 바탕으로 공관위가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 관계자는 “구체적인 평가 항목과 채점 방법은 개정된 당헌·당규를 바탕으로 공관위가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 관계자는 “구체적인 평가 항목과 채점 방법은 개정된 당헌·당규를 바탕으로 공관위가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 관계자는 “구체적인 평가 항목과 채점 방법은 개정된 당헌·당규를 바탕으로 공관위가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 관계자는 “구체적인 평가 항목과 채점 방법은 개정된 당헌·당규를 바탕으로 공관위가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 관계자는 “구체적인 평가 항목과 채점 방법은 개정된 당헌·당규를 바탕으로 공관위가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 관계자는 “구체적인 평가 항목과 채점 방법은 개정된 당헌·당규를 바탕으로 공관위가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 관계자는 “구체적인 평가 항목과 채점 방법은 개정된 당헌·당규를 바탕으로 공관위가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 관계자는 “구체적인 평가 항목과 채점 방법은 개정된 당헌·당규를 바탕으로 공관위가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